

1.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2차)

- ① 경찰국가에서는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 ② 1794년 프로이센 일반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 ③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건축·보건·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비례적·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한 것은 경찰국가가시대가 아니라 법치국가가시대이다.

2. 한국 경찰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2차)

- ㉠ 포도청은 도적근절을 위해 성종 2년에 시작된 포도장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종종 치세기에 포도청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임무는 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갑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부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 ㉡ 189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경무청관제직장이 제정되었다.
- ㉢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재한국외국인민에대한경찰에관한한일협정’ - ‘경찰사무에관한취급서’ - ‘한국사법및감옥사무위탁에관한각서’ - ‘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인 사고가 반영되었다.
-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경찰청장만이 경찰에서 유일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 ①

해설 - ㉠ 포도청은 도적근절을 위해 성종 2년에 시작된 포도장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종종 치세기에 포도청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임무는 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갑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무청(경부 X)**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 189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다.

㉢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경찰사무에관한취급서**’ - ‘**재한국외국인민에 대한경찰에관한한일협정**’ - ‘**한국사법및감옥사무위탁에관한각서**’ - ‘**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타당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경찰서장(경찰청장 X)이 경찰에서 유일한 행정관청의 지위

를 가지고 있었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2 채용 2차)

- ① 경찰행정주체를 위하여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경찰행정관청이라 하며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이 이에 해당한다.
- ② 경찰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자기의 명의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경찰행정기관을 경찰의결기관이라 하며 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다.
- ③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경찰법 제17조 제1항

- ① 지구대장은 경찰행정관청이 아니고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 ②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에 해당한다.
- ③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4. 각 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2차)

-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유고 시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명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①

해설 - ㉠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 X)**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

- ㉡ 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3항,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4조 제2항
- ㉢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2항

- 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 ㉕ 국가공무원법 제10조

5.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의 개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2012 채용 2차)

㉑ 법령준수의 의무	㉙ 복종의 의무
㉒ 비밀엄수의 의무	㉚ 품위유지의 의무
㉓ 집단행위금지의 의무	㉛ 재산등록과 공개의 의무
㉔ 제복착용의 의무	㉜ 청렴의 의무
㉕ 종교중립의 의무	㉝ 지휘권남용금지의 의무

- 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4개
- ②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2개
- ③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 ④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정답 - ②

해설 - ㉑ 법령준수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㉙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㉒ 비밀엄수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㉚ 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㉓ 집단행위금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㉛ 재산등록과 공개의 의무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㉔ 제복착용의 의무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㉜ 청렴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㉕ 종교중립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㉝ 지휘권남용금지의 의무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6.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2차)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정답 - ④

해설 -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의2 제2항). 무기는 경찰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2차)

-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구성을 각자가 맡은 임무의 기능 및 성질상의 차이로 구분하여 보수를 달리하는 통제체계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 ②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의 범위는 좁아지는데 반하여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진다.
- ③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④ 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경우 서로 모순되는 지시가 나오고, 이로 인해 집행하는 사람은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혼선과 그로 인한 비능률을 막기 위해서 명령통일의 원칙이 요구된다.

정답 - ①

해설 -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구성원들을 권한·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하계급 내지 계층별로 배열하여 집단화한 뒤 각 계층간에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고 명령계통과 지휘 감독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8.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2 채용 2차)

- ①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일반통치권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
- ②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③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③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 ①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이 아닌 특별권력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
- ②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징계사유가 아니라 직위해제사유이다.
- ④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할 수 있다 X)**.

9. 경찰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2차)

- | |
|---|
| ㉠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다음 X)**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국회 X)**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9조).

㉢ 국가재정법 제31조

㉣ **기획재정부장관(경찰청장 X)**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 32조 제33조).

10. 경찰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2차)

- ① 국회는 경찰 관련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바, 법원의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 ② 법원은 법적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통해 경찰활동을 통제하는 바, 법원은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 ③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 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 ④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이나 감독권 등의 훈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11. 서울중앙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甲경사와 乙순경은 112순찰 근무 중 관내에서 ‘술에 취한 남편(A)이 집에서 아내(B)를 폭행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甲경사와 乙순경이 취한 다음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2차)
- ① 아내(B)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 ② 남편(A)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아내(B)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 ③ 아내(B)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 ④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A)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였다.

정답 - ④

해설 -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즉, 경찰이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한다.

1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2차)

-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한다.
- ㉢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한다.
-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 ㉤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고,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 ④

해설 -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2호

-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7호
-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6호
-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1조 제5항

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6조 제2항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 채용 2차)

- ①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에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상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③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 ④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①

해설 - ①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② 대판 2006.7.6, 2005도6810

③ 대판 2004. 2. 12, 2003도6282

④ 대판 2009.4.9, 2008도11282

14. 경비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2 채용 2차)

- ①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IGN, 프랑스의 GSG-9 등이 있다.
- ② 진압활동시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이다.
- ③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원칙’은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 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이다.
- ④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경찰청이다.

정답 - ②

해설 - ①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 등이 있다.

③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중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은 목적물 보존의 원칙이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원칙’은 여러개의 통로와 출입문은 위해가 증대되므로,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오직 하나의 통로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소방방재청이다. 경찰은 현장통제 등 구조 및 피해복구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15.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반행위는 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 오후 1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2012 채용 2차)

①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② 적용대상 법규위반 행위에는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이 있다.

③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④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속도를 15km/h 초과 운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정답 - ④

해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km/h 이내로 속도위반하면 운전면허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

16. 운전면허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2차)

- | |
|---|
| <p>㉠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p> <p>㉡ 19세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p> <p>㉢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을 잃는다.</p> <p>㉣ 면허 있는 자가 약물·과로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이다.</p> <p>㉤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4년이다.</p> |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①

해설 - ㉠ 타당

㉠ 18세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타당

㉢ 타당

㉣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2 채용 2차)

① 해상시위·공중시위,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②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36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집회 금지통고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65db이하이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해상시위·공중시위,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는 신고대상이다.

②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60db이하이다. 주간의 경우가 65db이하이다.

18.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2차)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

분 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 ㉔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㉕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㉖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
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㉖ 보안관찰법 제3조

- ㉔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면제요건을 갖춘 자(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
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하여
야 한다 X).
- ㉕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장관 X)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㉖ 보안관찰법 제23조
- ㉗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19. 범죄인인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2차)

- ①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법 규
정에 따른다.
- ②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③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 ④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군사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우리나라는 명문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 ①

해설 - ①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른다(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

② 범죄인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
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에는 정치범에 해당하는 범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인도의 예외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20.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2차)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